

돌아온 추다르크... 국회 법사위원장에 추미애 내정

이춘석,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사임...추, 법사위 사개특위 등 활동
민주 “검찰개혁 이끌 책임자”...국힘 “법사위원장 야당 몫” 거센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6일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휘말린 이춘석 의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다.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특별하고 비상한 상황인 만큼 일반적인 상임위원장 선임 방식을 벗어나겠다”며 “가장 노련하게 검찰개혁을 이끌 수 있는 추미애 의원에게 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당내 최다선(6선) 의원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20대 국회에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만큼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분야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각종 개혁 입법의 관문 역할을 하는 법사위의 위원장직에 추 의원을 내정한 것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검찰개혁을 원활히 추진하겠다는 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이 의원의 사퇴 이후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요구를 거절한 것이기도 하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전 “장운선의 취재편 의점” 유튜브에 출연해 국민의힘 요구와 관련해 “(비유하자면) 도둑질했다고 해서 살인마한테, 그것도 연쇄살인마한테 (넘기라는 것인가) 말 같지 않은 얘기니 안 들은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당 원내 핵심 관계자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은 우리 당 몫이라서 야당에서 백번, 천번 요구해도 줄 수 없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

주당은 이춘석 위원장의 탈당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고는 추미애 법사위원장 카드로 자신들만을 위한 ‘맘대로 독재국가’의 최전선을 구축하려 한다”며 “(그 카드와 같은) 대국민 전쟁선포는 중단하라”고 썼다.

나 의원은 “추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보여준 행태는 한마디로 무소불위 여당 맘대로였다”며 “민주당이 일말의 반성을 한다면 당연히 법사위원장 자리를 의회민주주의의 오랜 전통에 따라 국민의힘에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민주당 법사위원장이 대형 사고를 쳤으면 의석을 앞세워 탈취해간 그 자리는 야당에 돌려줘야 마땅하다”며 “추 의원은 그동안 사고 많이 치신 분인데 민주당도 인물이 참 없나 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김건희 부부 때문에 국민의힘은 엉망이 됐다. 정청래·추미애 조가 민주당을 망가뜨리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며 “국민은 오만한 권력을 결코 인내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한지아 의원은 2012년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이던 우원식 국회의장이 “법사위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국회의 역할을 위해 야당이 맡는 것이 맞다”고 말한 기사 내용을 공유하며 “민주당의 논리라면 법사위원장은 당연히 야당 몫이어야 하지만, 민주당은 또다시 새로운 법사위원장을 내정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야당 몫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되돌려달라. 국회 내 견제와 균형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내 자신의 의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檢 개혁 완성의 시간...정상화법 8말9초 당론 발의”

민행배 민주 검찰개혁특위위원장

수사·기소 완전 분리, 중수청 설치
형사사법 시스템 기본권 중심 설계

“검찰개혁은 권력기관 개혁이자, 민생 개혁입니다. 윤석열 검찰독제가 무너뜨린 민주주의와 민생, 헌정질서를 반드시 바로 세우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새 사령탑에 취임한 정청래 대표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검찰개혁특별위원장을 맡은 민행배(광산을) 국회의원은 6일 광주일보와 서면인터뷰를 통해 검찰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민 의원은 “검찰개혁, 이제는 ‘완성’의 시간”이라며 “정청래 당대표께서 강조한 3대 개혁(검찰·언론·사법) 중, 검찰개혁은 민주당이 가장 오래 준비해온 과제다.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으로서, ‘완성’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우려에 대해서는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는 8월 말까지 검찰정상화법을 만들고, 이를 당론으로 확정할



또 특위의 두 가지 목표도 소개했다.

민 의원은 “첫째,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일이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 범죄수사청을 신설하겠다”면서 “둘째, 국민주권을 실현하겠다. 형사사법 시스템을 국민 기본권 중심으로 다시 설계하고, 민주주의 원칙 위에 새로운 제도를 세우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예정이다”면서 “법안 발의 이후 즉, 9월부터는 법사위에서 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법조계, 학계 등 외부 전문가들을 모시고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고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번 호남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5·18 정신도,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도, 이번 전당대회도 호남은 언제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출발점이자 보루였다”며 “이번에도 개혁의 길을 흔들림 없이 선택해주겠다. 민주당에 대한 기대, 개혁에 대한 의지, 잘 먹고 잘 사는 호남에 대한 바람이 모두 담긴 결과”고 평가했다.

이재명 정부 초기 평가에 대해서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시작부터 효능감이 다르다. 민주주의가 살아나고, 민생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체감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정상화특별위원장으로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인 ‘국민주권’ 실현에 앞장서겠다”며 “‘국민주권검찰정상화특위’가 행동하고, 민주당이 뒷받침하고, 주권자 시민이 함께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검찰독재를 끝내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기까지 광주·전남의 힘과 지혜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면서 “RE100, AI, 문화관광 등 광주·전남이 산업의 중심, 국가의 중심으로 도약할 기회를 반드시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여의도 브리핑

“한미 관세 협상으로 산업 위상 공고해질 것”

안도걸 의원 “경제 불확실성 해소”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최대 복병이었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이번 협상은 인수위도 없이 새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단기간에 이룬 성과로,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고 경쟁상대인 일본·EU와 유사하거나 더 나은 조건을 확보한 점은 분명한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다만 “FTA 혜택 상실·대미 투자 규모·산업 공동화 우려라는 세 가지 측면은 여전히 우려된다”고 지적하면서 “한미 FTA 체결로 사실상 무관세였던 자동차에 대해 15% 관세가 부과되어 일본·EU와의 2.5%포인트 우위를 상실한 것은 아쉬운 결과”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안 의원은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 계획은 절대 규모로만 보면 큰 금액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대미 수출 및 무역흑자 규모와 비교하면 타당한 면이 있다”며 “이번 투자를 단순한 비용이 아닌 첨단산업 진출과 글로벌 공급망 내 입지 선점의 전략적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협상을 계기로 한미간 기술과 산업 협력이 강화되고, 세계 경제 속에서 우리 산업의 위상이 한층 공고해질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내에서는 첨단 R&D를 지속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산업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 “대통령실에 ‘대주주 기준’ 의견 전달”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6일 주식 양도 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 세제 개편안과 관련, 여론을 반영한 당의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대주주 기준 관련 논란이 있어서 살펴보고 있다”

며 “일부의 오해와 달리 당에서는 민심, 여론까지 다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대통령실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 금방 바꾸고 그러면 더 혼란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수정하면 수정하는 대로, 유지하면 유지하는 대로 가야 한다. 두 번, 세 번 바꿀 수 없다”며 “대통령실에서는 어떻게 할지 심사숙고하겠다는 스

탠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실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진 지켜봐야 한다”며 “저희 의견을 전달했으니 저희는 기다리고 있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西)여의도의 체감과 동(東)여의도의 온도다 많이 다른 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사당이 있는 서여의도와 증권가가 위치한 동여의도에서 감지할 수 있는 대주주 기준 관련 여론이 다르다는 의미로, 그만큼 세제 관련 정책 결정에 여론을 의식하고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